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 중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윤석 2015광주하계U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21일 밤 발부되자 김 총장이 구금되기 위해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엇갈린 진술·삭제된 이메일 파악 주력

광주지검, 수영선수권 공문서 위조 수사 새국면

김윤석 사무총장 등 핵심 둘 구속 … 진상규명 속도

"안타깝다… U대회까지 차질 빚을라" 우려 목소리

김윤석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등 핵심당사자 2명이 구속되면서 정부보증서 위조 사건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김 총장 등 핵심 당사자 2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공문서 위조 자체는 중대 사안이지만 공무원 신분인 김 총장 등을 구속까지 해야하는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무원이 구속될 경우 자격은 정지되고, 기소돼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없다.

광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국일)는 지난 21일 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김 총장과 한씨를 구속한 뒤 22일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향후 이들을 기소할 때까지 '엇갈린 진술'과 '삭제된 이메일'의 진위와 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6급 직원이 상부의 지시나 묵인 없이 자발적으로 정부보증서 위조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검찰의 기본적인 자세다.

검찰은 구속기간(10일 이내) 안에 이들을 기소해야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1차례 연장(10일 이내)이 가능하다. 따라서 9월10일 전후까지 핵심당사자들을 상대로 사전조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금까지의 진술의 신빙성을 재검토하고 다른 관련자들도 불러 추가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안은 국무총리의 사인을 위조해 외국에 보낸 중대 사건"이라며 "PDF 파일 전자문서가 이미 FINA(국제수영연맹)에 전달돼 출력됐고, 최종안에서 제외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무총리실의 적발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에 대한 검찰의 답변인 셈이다.

하지만 광주시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한씨 등의 공문서 위조 등의 행위가 사익이 아니라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과정에서 고의나 의도보다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강했다는 데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또 보고체계를 통한 조직적인 행위로 보기도 어렵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행정 시스템 속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이 적발됐을 때 초기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냈어야 하는데도 이 문제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된 원인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청이나 지역 내 분위기도 얼어붙고 있다. 김 총장 등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해 놓고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처벌을 받아야하는데다,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차질이 당장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 총장 측은 이런 사정을 들어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하면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소 후에는 보석 신청을 통해 석방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80억 횡령' 공무원 부부에 140억 폭탄

광주지법, 추징금 80억·배상명령 60억 판결

사채 등으로 탕진 … '선언적 의미'에 그칠 듯

80억 횡령 전 공무원 부부가 140억을 내놓을 수 있을까?

80억원의 국고를 횡령한 전 여수시 공무원 부부에 대해 22일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가 항소심에서 추징금 80억원(남편 47억원·아내 33억원)과 배상명령 60억원을 추가로 선고했다.

남편과 아내에게 징역 9년,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며 추징금을 더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횡령액을 모두 소비했거나 찾지 못해 몰수할 수 없으면 추징을 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여수시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로 하여금 시에 횡령액 60억여원을 지급하도록 배상명령도 했다.

배상명령 신청은 여수시가 시기를 놓쳐 1심에서 각하되고 항소심에 와서야 받아들여졌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김씨 부부가 내야 할 추징금과 배상금은 모두 14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은 사채 등으로 횡령액을 이미 탕진한 것으로 알려져 현실적으로 납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추징금은 범죄에 대한 벌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범죄자가 불법적으로 얻은 물건을 돈으로 되받아내는 것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배상명령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형벌의 하나인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당 일정액을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 그러나 무일푼인 사람에게 거액의 추징금이나 배상명령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강완묵 임실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강완묵(54) 임실군수가 7번의 재판 끝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2일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세 번째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군수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강 군수는 (핵심 참모) 방모씨가 84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차용한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중 1100만원을 회계책임자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여대생에 야한 영상 보낸 고교생

쌍나팔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이성에게 수차례 영상전화로 '은밀한' 영상을 보내온 10대 고교생이 경찰서행.

○…22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최모(17·고교 2년)군은 지난달 4일 새벽 2시께 광주시 남구 풍암동 A아파트 자신의 방에서 A(여·18)양에게 영상전화를 건 뒤 자위 행위를 하는 장면을 찍어 보내는 등 같은 달 28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음란영상을 전송했다는 것.

○…경찰에서 최군은 "SNS로 알게 된 A양에게 호기심이 생겨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교묘하게…

스미싱 주의보 … 웨딩사진첩 문자에 적힌 링크에 접속 피해

최모(36)씨는 지난 20일 "토요일 결혼식 잊지 말고 축복하러 와주세요 웨딩 사진첩 http : //goo.gl/A5mCJQ"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지인의 결혼 소식을 들었던 최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문자에 적힌 링크에 접속했다. 잠시 후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되는가 싶더니, 29만원 가량이 결제됐다는 문자가 왔다. 최씨는 그제야 자신이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됐다.

김모(여·37)씨도 최근 휴대전화로 온 '모바일 청첩장이 도착했습니다. 일정/장소/참석자' 문자메시지를 보고 결혼을 앞둔 친척 청첩장인 줄 알고 무심코 누르려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스미싱 사기'라는 아들의 말을 듣고야 중단했다.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모바일청첩장'부터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등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데다, 외국에 서버를 둔 채 운영하는 탓에 경찰의 단속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은 "소액 결제를 원천 차단하거나,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는 보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은밀하게…

성매매 주택가 확산 …광주경찰, 업주·여종업원 76명 검거

왜곡된 성문화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키스방·허브샵 등 신종 성매매업소가 주택가까지 은밀하게 확산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2일 불법 성매매 알선·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오피스텔을 빌려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가 하면 주택가에 음란 전단지를 뿌리고 연락이 오는 남성과 개별적으로 만나 성매매를 한 여성 등 불법 신·변종업소 업주 40명과 여종업원 31명 등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의 경우 업주가 주택가 원룸 3~4개를 빌리고 인터넷에 연락처를 남기면 성매수자가 연락해 찾아가는 방법으로 은밀하게 진행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개별적 출장 성매매도 전단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모텔 등지의 숙박업소에서 만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유흥주점은 단속을 교묘히 피해가며 주변 모텔 업주와 미리 계약, 성매매 장소를 임대해 놓고 주점에 찾아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여종업원과 이른바 2차로 통하는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의문사' 허원근 일병 사인 항소심서 '자살'로 뒤집혀

"부실수사 위자료 3억 지급"

1980년대에 군 복무 중 의문사한 허원근 일병(진도 출신)의 사인이 타살이 아닌 자살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군 당국의 부실한 수사로 장기간 의문사로 처리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강민구 부장판사)는 22일 허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국가가 유족에게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된 것으로 판단한 원심과 달리 스스로 M16 소총을 3발 쏴 자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사건을 조사한 헌병대 수사가 현저하게 부실하게 이뤄져 이 사건이 30년간 의문사로 남았다"면서 "군대에 가족을 보낸 유족의 고통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3타경 2864	1	목포시 삼학로 376-1, 5동 4층 401호 [용해동,용해2차아이프아파트] 84.465㎡	아파트	103,000,000 103,000,000	임차인[전세권자]있음,선순위전세권자김성환의전세권은인수됨
2013타경 3058	1	목포시 상동 27-3 거성베스트빌 101동 4층 402호 59.84㎡	아파트	89,400,000 89,400,000	
2013타경 3201	1	목포시 산정동 994-4 중앙하이츠아파트 3동 6층 604호 56.07㎡	아파트	70,000,000 70,000,000	
[대지/임야/전답]					
2013타경 2697	1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730 1286㎡	답	66,872,000 66,87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 2796	1	신안군 암태면 단고리 982-7 2589.7㎡	답	16,056,140 16,056,14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 2994	1	신안군 암태면 신석리 산11-13 298㎡	전	8,041,370 8,041,37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매각외제시외건물있음[목록2]
		동소 산11-14 893㎡	전		
		동소 산11-24 496㎡	전		
		동소 산11-27 1686㎡	전		
		동소 산13-18 1289㎡[공유자김종선지분3분의2전부]	임야		
2013타경 3263	1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431 1112㎡	대	8,451,200 8,451,200	매각외제시외건물있음
	2	동소 1361-3 1410.2㎡[박여단지분66분의3전부,이계화지분66분의2전부,이모이세지분66분의2전부,이계성지분66분의2전부,이안나지분66분의2전부]	답	8,444,700 8,444,7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1361-4 1044.5㎡	답		
	3	동소 산100 3273㎡	임야	2,945,700 2,945,700	
2013타경 3331	1	무안군 삼향읍 임성리 59 2169㎡[나종님지분4688분의1382전부]	전	120,234,000 120,234,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공유자우선매수행사제한있음
		동소 56-12 2519㎡[목록1과지분동일]	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3타경 3393	1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산10-7 83682㎡	임야	318,341,600	일괄매각,목록1분묘소재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동소 산10-17 200㎡	임야	318,341,600	
2013타경 3591	1	영암군 군서면 도장리 816 5000㎡	답	46,000,000 46,00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 3720	2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486-1 3144㎡	전	17,292,000 17,29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3	신안군 지도읍 선도리 1123-1 383㎡	전	919,200 919,2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4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518-1 1145㎡	답	15,517,8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660 724㎡	전	15,517,800	
	5	함평군 대동면 월송리 산47-1 1406㎡[정영천지분2분의1전부][분묘소재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임야	2,038,700 2,038,700	공유자우선매수행사제한있음
	6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산122-1 67537㎡[정영천지분5분의1전부][분묘소재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임야	25,664,060 25,664,060	공유자우선매수행사제한있음
	7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25 463㎡[말소되지않는최선순위지상권존재함]	전	23,150,000 23,150,000	철재비닐하우스소재
	8	함평군 해보면 금계리 173 641㎡	답	5,384,400 5,384,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9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 736 1656㎡[정영천지분5분의3전부][분묘소재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전	4,968,000 4,96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공유자우선매수행사제한있음
	10	무안군 망운면 목서리 66-2 110㎡	대	11,220,000 11,220,000	
	11	영암군 군서면 해창리 646-5 3924㎡[정영천지분3924분의1653전부]	답	15,538,200 15,538,2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있음
2013타경 3805	1	함평군 함평읍 옥산리 259-1 684㎡[농지취득자격증명요,비닐하우스소재]	전	6,498,000 6,498,000	분묘소재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2013타경 3867	1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56 597㎡	답	29,253,000 29,253,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3타경 4006	1	목포시 옥암동 1026-1 1489.3㎡	대	953,152,000 953,152,000	
2013타경 4419	1	함평군 신광면 계천리 산28-1 28860㎡[정귀임지분2분의1전부]	임야	31,746,000 31,746,000	공유자우선매수행사제한있음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3. 9. 9.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3. 9. 16.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3.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이영복